

2015.4.9. 금융학회

토론: “최근 지급결제 혁신동향과 정책과제” (발표: 김규수팀장)

김 자 봉
금융연구원 연구위원

Contents

1. 왜 지급결제 혁신인가?
2. 혁신의 부가가치
3. 몇 가지 논점

왜 지급결제 혁신인가?

(1) 1차혁신의 성공: 정부주도 ICT.

- 은행 중심 전자금융공동망 결제 비중 85.5%.
(인터넷뱅킹 49%, 모바일 0.53% 카드 3.7%)

(2) 2차혁신의 등장: 민간 ICT 주도.

- ICT의 발전: 간편결제수단, p2p crowdfunding, branchless banks(internet banks)
- 국내외 b2c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발전과 전자결제 수요
b2c거래 연간성장률: 국내 19%, 국외 17%

혁신의 부가가치

- (1) 1차 혁신의 성과를 더욱 효율화. 예. Active-X 및 공인인증 간소화 혹은 폐지
- (2) Social network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금융서비스(다양한 소비자의 다품종 소량의 long tail demand 충족. P2p lending, crowdfunding, 증권거래, 모바일송금)
- (3) b2c전자상거래 효율화 및 모바일 시장 규모 확대

몇 가지 논점

- (1) 2차 혁신의 시점이 왜 이리 늦게 왔는가?
- (2) 상호적인 동등기회원칙을 해치지 않는 시장조성 방안
- (3) 근거법률: 은행법 vs. 여타 규정
- (4) 적절한 사회적 투자 수준: 혁신을 위한 인프라투자 비용 부담의 주체
- (5) In-bound vs. out-bound 경쟁: 국내 및 국가간 결제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outbound 경쟁 가능성

뒤늦은 2차 혁신: 이유는?

- (1) 국내 금융공동망(KFTC) 구축이 1986년으로 미국 EPN 설립(1999년) 보다 13년 앞섰음.
- (2) 그런데 왜 미국의 Paypal(1998년)로부터 핀테크를 배우고 있나?
- (3) 국내 핀테크 등장
 - 페이게이트(1998, 결제대행업체)
 - 싸이월드 도토리(1999년)
 - 모네타캐시(2004년). Cf. 미국 moneta cash(2014. bitcoin)
 - 뱅크월렛카카오(2014년.)
 - 'NFC간편결제' 금감원 보안성심의 통과(2015.2)
- (4) 늦은 이유?
 - 시장환경
 - 감독환경(보안성심사 폐지예정. Principle- vs. rule-based regulation)

동등기회원칙과 시장조성

- (1) 동일 진입기준 vs. 완화된 진입기준
-예. 자본금, 금산분리원칙.
- (2) 업무범위 설정: 예. 핀테크 업무분야
 - 해외송금:외국환거래법
 - 모바일: 전자금융거래법
 - 개인자산관리: 투자자문업
 - 크라우드펀딩: 별도 업법. 적합성원칙, 증권신고서 제외로 인한 소비자보호취약점
 - 대출: 하루1%이자=1년365%이자?
 - 가상화폐: 전금법상 전자화폐발행자 금융위허가.=> 이 모두를 포괄허용? + 기준 완화?
- (3) 규제차익 vs. 실질편익: 수익은 규제차익일 뿐인가 실질
편익인가?

근거법률: 은행법 vs. 여타 규정

- (1) 미국: FinCEN Prepaid Access Final Rule, 18 U.S. Code § 1960 - Prohibition of unlicensed money transmitting businesses에 의한 등록. Dodd-Frank Act 소비자보호.
- (2) 영국: Electronic Money Regulation 2011
- (3) 국내: 은행법 vs. 전자금융거래법 vs. FIU법 중 어느 것이 더 타당?
 - narrow bank 혹은 인터넷뱅크이면?
 - 새로운 ICT 기반 p2p, money transmitter이면?
- (4) 예. Paypal의 자기 플랫폼 계정상 부채는 은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 paypal의 자기부채.

근거법률: 은행법 vs. 여타 규정

- (1) 미국, 영국 등 해외사례에 비추어 보면,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법률논쟁과는 무관
- (2) 실질편익의 존재여부 확인 후 단계적으로 검토 필요한 사항. 법이 먼저가고 실질편익이 뒤 따르는 방식(hurry-up approach) vs. 실질편익이 먼저 나오고 법이 따라가는 방식(step-up approach)
- (3) 전자금융거래법, FIU법 활용 가능성 검토

적절한 사회적 투자수준

- (1) 적정수준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나? 핀테크 사업자 vs. 국가
- (2) 핀테크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인프라 필요. 예. NFC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수백만대 단말기 교체필요.
- (3) 이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여부 즉, 사업성 혹은 사회적 편익 가능성 판단 필요
 - 정말 의미있는 마진이 가능한가?
 - 금융소외의 해소 등을 위한 사회적 편익 창출 가능한가?
 - 전혀 새로운 금융공동망이 가능한가 아니면 기존 위에 +알파인가?

In-bound vs. out-bound 경쟁

- (1) ICT를 활용한 국내 경쟁 촉진 vs. 금융의 해외진출 수단 가능성
- (2) 핀테크 환경의 차이와 outbound 경쟁력
 - 미국: 주별 송금, 결제방식 차이. 실시간 결제 아직 불가.
 - 중국: 신용인프라, 공동망 체제 미비
 - 동남아: 전반적인 미비
 - 국내: 공동망 구축, 실시간 결제 가능

기술, 금융, 규제의 새로운 하모니 필요

- (1) 기술: 기술주도 핀테크 생태계 조성
- (2) 금융: 금융주도 핀테크 생태계 조성
- (3) 규제: 원칙중심규제(principle-based regulation)로 전환.
사전규제중심에서 사후감독방식으로 전환.
제재(enforcement)체제 전환도 필요.